KRIHS POLICY BRIEF

국토정책 Brief

제 254 호
2009. 11. 23

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과 시사점

박세훈 책임연구원, 정소양 연구원(국토연구원)

-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한국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, 국토관리차원에서 외국인의 거주가 미치는 공간적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
  - 국내 체재 외국인은 2007년 100만 인을 넘어섰으며 2008년 116만 인에 이름
  - 외국인의 증가추세는 전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, 유형별로는 노동자의 비중(61%)이 가장 높고,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의 비중(42.5%)이 높음
- 외국인은 유형별 · 국적별로 공간분포가 다르게 나타남
  - 노동자들은 수도권 및 동남권 일대 산업단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
  - 결혼이민자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산재, 유학생은 대학가를 중심으로, 전문인력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
  - 같은 노동자라도 한국계 중국인은 수도권 일대의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 집적하여 타 국적 노동자의 분포와는 차이가 있음
- 외국인은 대도시권(mega-city region)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, 대다수가 하위 노동시장에 속해 있어 향후 사회통합정책이 긴요해질 것으로 전망됨
  - 외국인 유입은 향후 수도권 인구증가에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
  -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족적, 공간적, 계층적 분리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
  -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빈곤,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와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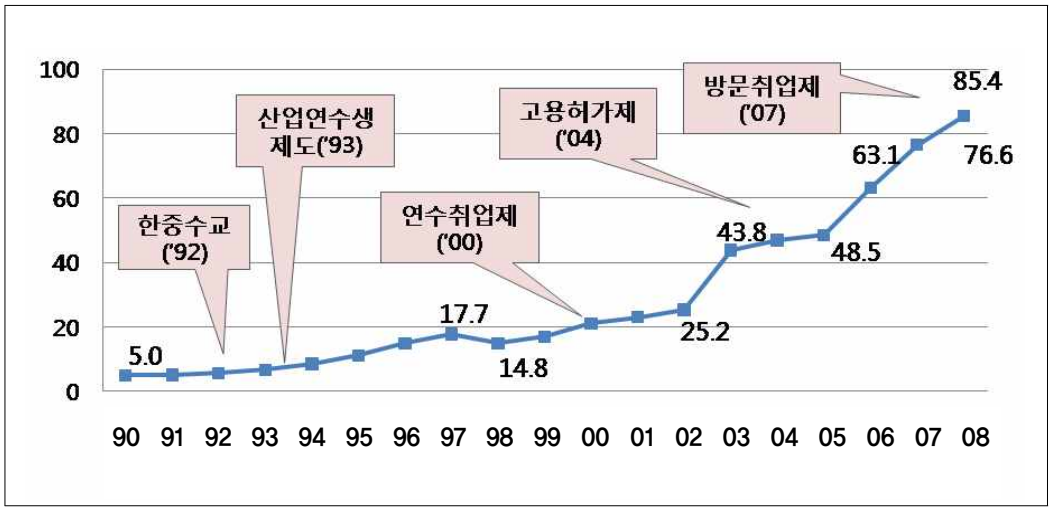
1.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사회 전개

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사회의 대두

- 국내 체재 외국인은 2007년 100만 인을 넘어섰으며 2008년 116만 인에 이르고 있음
  - 등록외국인(90일 이상 체류자격 보유)은 90년대 초반 5만여 인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8년 85만 4천 인으로 급증
  - 통계청 예측으로는 2020년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254만 인(총인구 대비 5%), 2050년 409만 인(총인구 대비 9.2%)에 이르러 영국(10.1%, 2006년)과 같은 수준의 복합민족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
- 국내 외국인 인구는 외국인 단기노동자의 유입을 허용하는 외국인 고용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증가하였으며, 결혼이주자 및 유학생의 증가도 영향을 미침

[그림 1] 국내 등록외국인의 변화추이

(단위: 만 인)



자료: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

공간적 접근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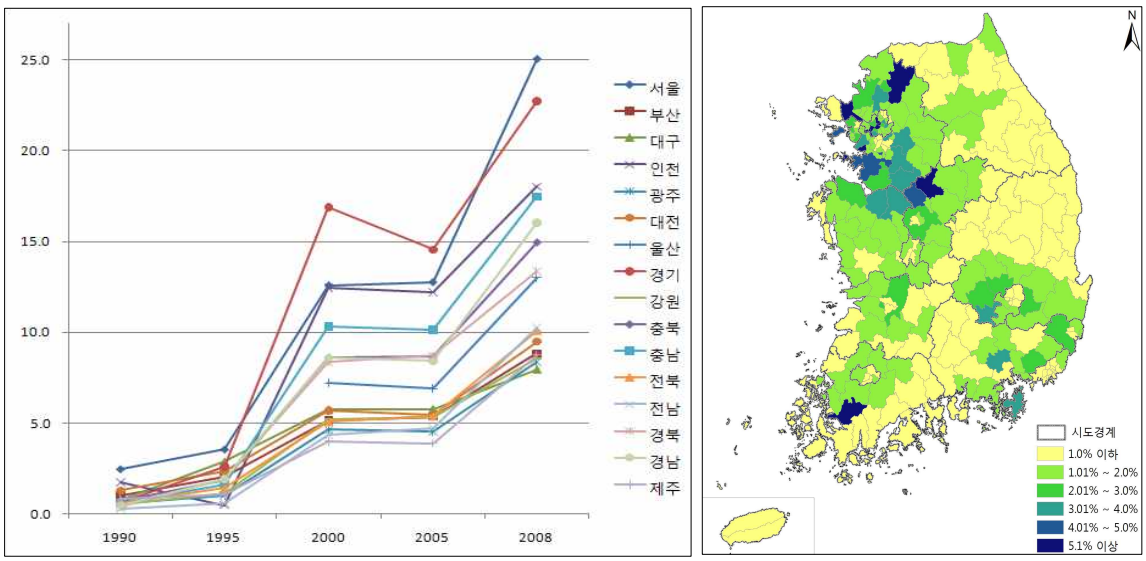
- 국내 외국인 관련정책은 노동정책, 교육정책 등 부문별 정책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으나, 외국인이 국토공간 및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음
- 외국인의 공간분포특성을 유형별 · 국적별로 파악하여 향후 다문화사회의 전개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

2. 외국인의 공간분포 총괄

■ 시도별 외국인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, 모든 지역에서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수도권 지역의 비중과 증가속도가 큼

- 경기 25.7만 인, 서울 25.6만 인, 인천 4.9만 인 등 수도권지역에 전체 외국인의 66%가 거주
- 인구 천 인당 외국인은 서울(25.0인), 경기(22.7인), 인천(18.0인)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, 그 외 충남(17.4인), 경남(16.1인), 충북(14.9인)순임

［그림 2］시도별 인구 천 인당 외국인 인구 추이(좌) 및 시군별 비중 분포(우)



자료: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

■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2만 인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 4곳이 수도권에 있으며, 외국인 비중 5% 이상인 지역 11곳 중 9개 지역이 수도권에 위치

- 외국인 인구가 2만 인 이상인 시군구: 서울 영등포구(3.5만 인), 구로구(2.8만 인),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(2.7만 인), 경기도 화성시(2.2만 인)
- 외국인 비중이 5% 이상인 시군구: 서울 영등포구(8.7%), 금천구(7.3%), 구로구(6.6%), 중구(6.5%), 용산구(5.4%), 종로구(5.3%),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(8.3%), 포천시(5.3%), 김포시(5.2%), 전남 영암군(6.8%), 충북 음성군(5.1%)

3. 외국인의 유형별 분포

■ 외국인을 체류자격에 따라 노동자, 결혼이민자, 유학생, 전문인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, 노동자가 52만 인으로서 전체 외국인의 60.9%를 차지

- 노동자의 비중은 1990년 약 2700인에서 2008년 52만 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, 이는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, 2004년 고용허가제 및 2007년 방문취업제 등 외국인 고용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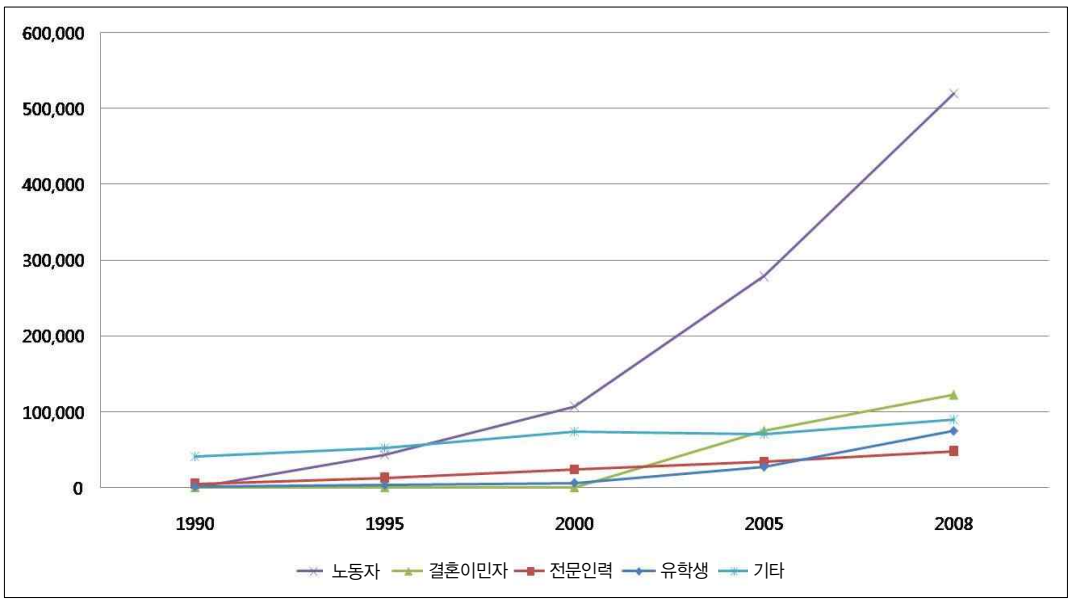
  ※ 산업연수생제도: 최장 2년까지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

  ※ 고용허가제: 연수기간 없이 3년간 외국인을 정규근로자로 취업 허용

  ※ 방문취업제: 중국 및 러시아 동포에게 최장 8년간 복수방문 및 취업 허용

- 결혼이민자는 12.2만 인으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유학생(7.4만 인), 전문인력(5.6만 인)이 그 다음 순임

[그림 3] 외국인의 유형별 인구추이(1990~2008)



자료: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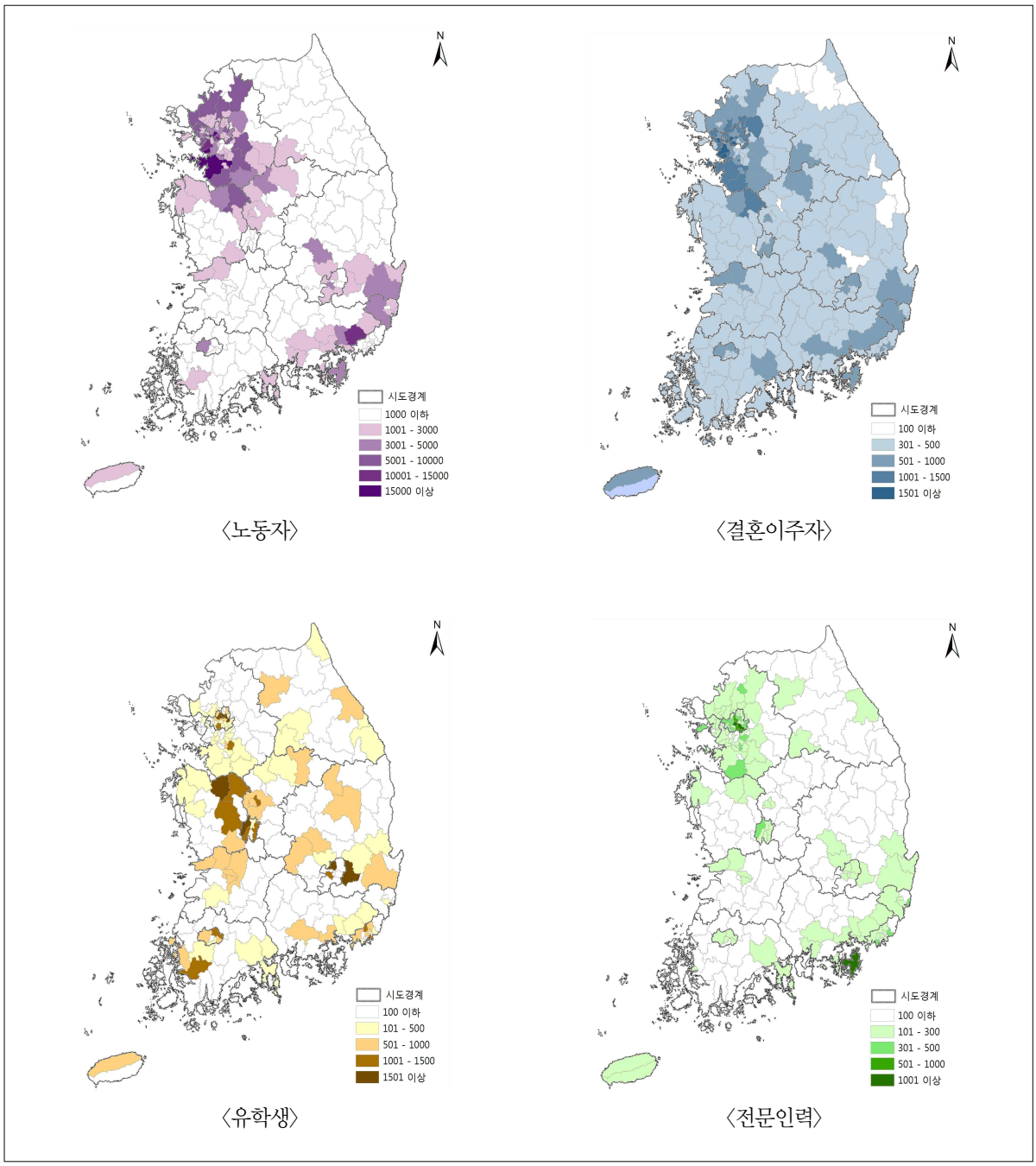
■ 외국인의 유형별 공간분포를 살펴보면, 노동자는 주로 산업단지 주변에, 결혼이민자는 전국적으로, 유학생은 대학가를 중심으로, 전문인력은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

- 노동자 유형은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한 이들로, 수도권 및 동남권 일대의 산업단지 주변에 집중 분포
- 결혼이민자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산재하고 있음

• 유학생은 서울 북부의 대학가와 경산시, 아산시, 천안시, 영암군 등 중국유학생을 집중 유치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분포

• 전문인력은 서울, 부산, 대전 등 대도시지역 및 거제시에 집중되어 있어 타 외국인의 분포와 상이함

［그림 4］ 외국인 유형별 공간분포(2008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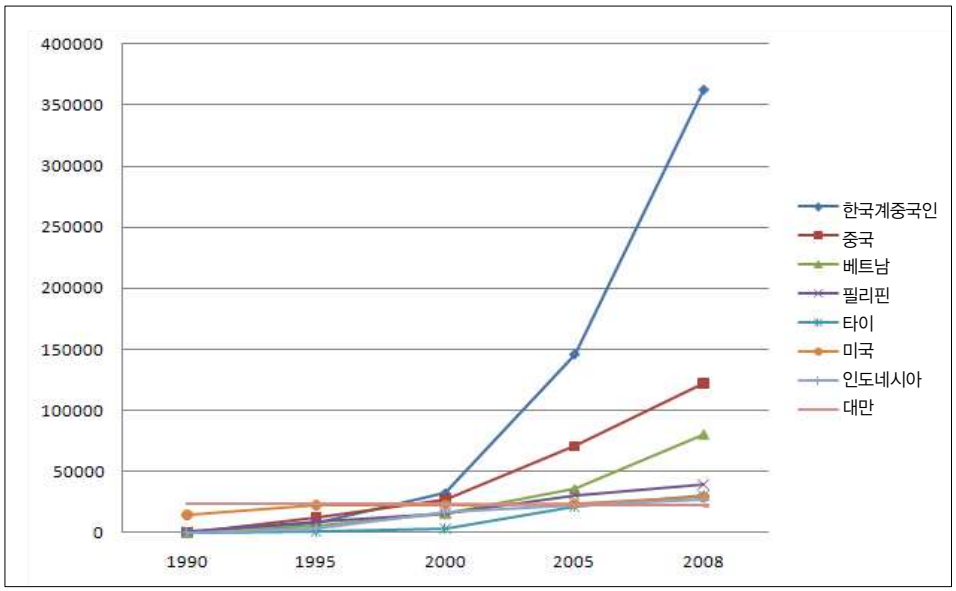
자료: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

4. 외국인의 국적별 공간분포

■ 1990년 국내 외국인은 대만, 미국, 일본 국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, 1992년 한중수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라 2008년 중국 48.5만 인, 베트남 7.9만 인, 필리핀 3.9만 인, 태국 3.5만 인, 미국 2.9만 인의 순으로 아시아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짐

- 특히 중국 국적 중 한국계 중국인(소위 조선족)은 36.3만 인으로 전체 외국인의 42.5%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매우 큼
- 한국계 중국인은 노동자의 비중이 83% 가량으로 높으며, 그 외 중국인은 유학생(44.6%), 베트남은 결혼이민자(33.9%), 필리핀은 노동자(69.8%), 미국은 전문인력(40%)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
[그림 5] 국적별 체재외국인 증감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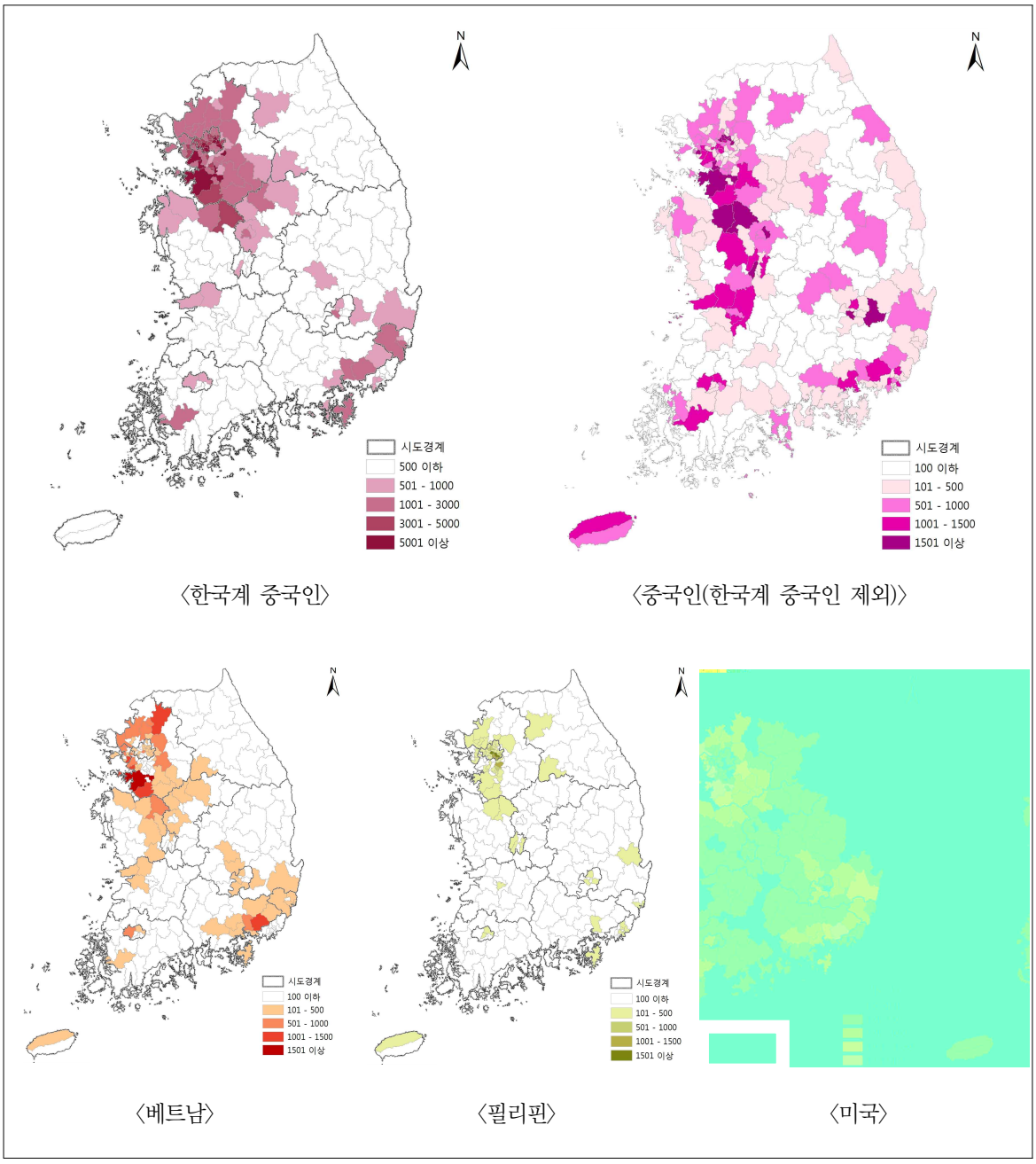
자료: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

■ 국적별 공간분포 역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국적별로 체류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
-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, 노동자의 비중이 높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지역에 분포하는 비중이 높은데, 한국어 구사능력을 바탕으로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- 기타 중국인의 경우, 노동자보다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국적으로 산재하는 특성을 보임

- 베트남인의 경우,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수도권과 동남권의 산업단지 및 전국 농촌지역에 고루 분포
- 필리핀인은 노동자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수도권 외곽과 동남권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포
- 미국인은 전문인력이 대다수이며, 서울 및 부산의 도심지역에 분포하는 특성을 보임

［그림 6］ 외국인의 국적별 공간분포(2008)



자료: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

5. 시사점

- 외국인은 유형별 · 국적별로 공간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남
  - 노동자들은 수도권 및 동남권 일대의 산업단지 주변에 집중 분포하고, 결혼이민자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산재하고 있으며, 유학생은 대학가를 중심으로, 그리고 전문인력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거주
  - 같은 노동자라도 한국계 중국인은 수도권 일대의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역에 집적하여 타 국적 노동자와 큰 차이를 보임

- 외국인은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, 소위 대도시권(mega-city region)에 집중도가 높아 향후 수도권과 동남권의 인구구조 및 사회구조 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
  - 수도권의 경우, 전체 외국인의 66%가 거주하면서 향후 외국인 인구가 수도권 인구증가의 주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

- 외국인 노동자가 대도시권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도시하위계층(urban underclass)을 형성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
  - 향후 도시하위계층의 국적별 직종과 공간분포는 '한국계 중국인 - 저차서비스 - 도심지역', '기타 외국인 노동자 - 단순제조업 - 대도시 외곽지역(산업단지 주변지역)'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
  - 계층 분리가 민족적 분리 및 공간적 분리와 함께 진행될 경우, 빈곤,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며, 이에 대응하는 사회통합정책 추진 필요

- 향후 외국인 밀집지역의 확산에 대응하는 '사회통합 도시관리정책' 마련 필요
  - 중앙정부 차원에서 '사회통합 도시관리정책'의 지침을 작성하여 향후 자치단체가 도시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
  - 자치단체별로 외국인 인구를 도시기본계획인구에 반영하고 외국인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정보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구축

국토연구원 녹색국토 · 도시연구본부 박세훈 책임연구원 (shpark@krihs.re.kr, 031-380-0220)
국토연구원 녹색국토 · 도시연구본부 정소양 연구원 (jungsy@krihs.re.kr, 031-380-0176)

발행처 국토연구원 **발행인** 박양호 **주소**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
전화 031-380-0114 **팩스** 031-380-0470 **홈페이지** www.krihs.re.kr
수록된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 지난호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국토연구원 KRIHS